

유틸리티

5개년 국정계획 유틸리티 업종 영향

유틸리티/운송/스몰캡

Analyst **김승철**
02. 6098-6666
seungchurl.kim@meritz.co.kr

RA **김정섭**
02. 6098-6663
jeongseop.kim@meritz.co.kr

'100대 국정과제' 에너지 관련 정책은 기존 대선공약과 별 차이가 없음. 신규 원전 6기 백지화를 골자로 한 탈원전 정책이 재확인되었고 전력 다소비형 산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 체제 개편 카드를 꺼냄

이미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 건설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상태. 7차 전력수급계획에서 계획된 미착공 원전 4기는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큼. 이미 알려진 뉴스로 관련주들 주가에 반영된 이슈임. 원전 정비 담당하는 한전KPS(051600)와 원전 설계를 맡고 있는 한전기술(052690) 주가 하락으로 일단락, 새로울 것이 없음

원전 신규 발주가 끊길 경우 설계 일감이 줄어 한전기술 입장에서는 매출 감소 요인, 한전KPS 역시 발전 설비 용량 감소에 따른 성장성 둔화 우려 존재하나 신고리 5,6호기 원전이 건설 중단되더라도 향후 5년간은 기저발전 설비용량이 늘어나게 됨. 최근 한전KPS의 주가 하락은 과도하다는 판단

한국전력(015760) 입장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체제 개편 이슈는 불행 중 다행. 정부는 내년부터 산업용 경부하 요금 할인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힘. 기저발전 비중 축소와 신재생 발전 확대 그리고 석탄에 세금을 더 물리고 LNG에는 관련 세금을 낮추는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한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로 판단

현행 경부하 요금은 23시~9시에 적용되고 최저 53.7원/kwh에서 최고 68.6원/kwh의 요금을 부과하고 있음. 당사 추정에 따르면 산업용 중 경부하 사용 비중은 약 42.6%로 이는 '16년 기준 산업용 판매수입 12조 7,232억원에 해당됨. 경부하 요금을 5% 인상할 경우 연간 6,361억원 이익 개선 요인이 발생

경부하 요금 자체를 폐지할 경우 전력 수요 분산 효과가 떨어져 주간 SMP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자칫 소탐대실 할 수 있음. 심야시간대 인위적인 전력수요 감소 조치는 기저발전 설비 이용의 비효율성을 야기하므로 경부하 요금 완전 폐지 역시 묘안이 아님. 어차피 야간에는 원전과 석탄 발전설비가 계속 운전되므로 심야시간대 전력수요가 급감하면 저장에 힘든 전력의 경우 기껏 생산해서 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 따라서 경부하 요금 제도는 유지하되 현행 대비 할인율을 축소하는 선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큼

Compliance Notice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7년 7월 20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7년 7월 20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7년 7월 20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승철, 김정섭)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